



2016년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 스캔들 당시, 캠페이너들이 런던 트라팔가(Trafalgar)에서 조세피난처를 모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국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지도자들에게 탈세행위 제재를 촉구했다. 사진: Andy Hall/Oxfam

세금, 스캔들을 멈춰라

-정부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다국적 기업과 최상위 부자들이 정당한 몫을 부담하지 않고 탈세(脫稅)의 길을 선택할 경우, 최빈국들과 최빈계층들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탈세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s)가 보여주듯 여전히 영국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브리핑 노트는 각 정부들이 탈세와 조세 피난처로서의 불명예를 내려놓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5가지 주요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www.oxfam.org
www.oxfam.or.kr



서론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The Paradise Papers) 스캔들은 부유한 대기업들과 최상위 부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행 세금 법,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 세계 8 명의 재산의 합이 다른 36 억 명의 재산의 합과 같을 정도로¹ 지금의 불평등 위기는 심각합니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고,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부유한 사람들과 기업들의 탈세가 확산되면서 불평등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특급 부자들이 세금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빈곤한 국가와 사람들, 특히 여성들입니다. 부에 대한 세입이 감소하게 될 경우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축소하는 것과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메꾸는 것뿐입니다.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같은 국제적인 폭로는 조세 회피처의 비밀 유지를 이용해 개인 은행, 법률, 회계 및 투자 산업 네트워크가 어떻게 기업 이윤과 부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특급 부자들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30% 적은 금액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² 이들이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금액은 7 조 6 천억 달러에 달하며³ 이는 영국과 독일의 국내 총생산(GDP)을 합친 것보다 더욱 높은 수준입니다.

탈세를 위한 조세 피난처의 사용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불평등을 타파하는 데에 있어 진보적인 조세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이 유해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포함한 옥스팜의 제안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옥스팜은 정부가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는 5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조세 피난처를 폐쇄해야 합니다.

- 조세 피난처의 폐쇄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악의 조세피난처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강력한 제재와 같은 대응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제 상황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 작성에 동의한 모든 국제협약체(international initiatives)의 약속은 결국 위조(whitewashing)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득권층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방해함에 따라, 최악의 조세 피난처들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취지대로- 탈세를 장려하거나 조세 피난처로 탈바꿈한 국가들을 감시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의- 올바른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이 블랙리스트의 취지는 빛을 바래게 됩니다. 비록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 사건을 통해 탈세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개인 및 기업 단위의 탈세자들이 거리낌없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기업들이 탈세를 위해 조세 피난처로 소득을 이전시키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한 금액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조세 피난처에 투자를 유도하는 기업의 탈세방식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1,000 억

달려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⁴ 기업들이 활용하는 조세 피난처는 비상주기업(non-resident companies)에 대해 0%에 가까운 법인세, 면세 및 조세 허점(tax loopholes), 재정적 비밀과 같은 세금 특혜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이윤창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세율이 낮은 조세관할권(low-tax jurisdictions)으로 과세 대상의 금액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고의로 자산의 소유권이나 매매 지역을 조세 피난처 내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paper subsidiaries) 소유로 변경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세 피난처가 법인세를 줄이면서 기업들간의 조세회피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거소가 다를 바 없습니다. 옥스팜은 전 세계 최악의 법인세 피난처로 버뮤다(Bermuda),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및 네덜란드를 선정했습니다.⁵

이런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은 법인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국가들은 최상위 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수많은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 항공기, 요트 및 사치품 구매를 위해 돈을 세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자들을 자신들의 국가로 데려오기 위해 경쟁까지 벌이는 추세입니다. 국제 사회가 한시라도 '조세 피난처'에 대한 논의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활동 중인 조세피난처를 정당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결책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최악의 조세피난처들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투명성 측정, 매우 낮은 세율과 세금을 크게 줄이는 부당한 세무 관행 등에 대한 유무 등이 이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범법에 대한 제재와 준법에 대한 포상을 동원하여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

고, 조세 피난처로 인한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세수 손실에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외국회사에 대한 통제규정(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나 투자금과 같이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지급금(risky payments)에 대한 원천징수 세 도입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정책들을 국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다른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 사건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세계 최초로 기업 및 개인의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법안의 제정과 입법을 위해 국민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면 과제

최근 발생한 세금 스캔들 이후 유럽 연합(European Union)⁶ 과 G20 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주도 하에⁷ 조세 피난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G20 와 OECD 가 각 국가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이런 범죄들에 대한 또 다른 은닉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17 년 6 월 OECD 는 재정 투명성만을 기준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놀랍게도 여기에는 단 하나의 국가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입니다. 2017 년 12 월 5 일에는 OECD 의 리스트와는 달리 0%의 법인세를 비롯하여 투명성, 세금 공정성 시험 등 좀 더 적극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EU 의 블랙리스트가 공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EU 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옥스팜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법인세 피난처 리스트에 등재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및 키프로스

(Cyprus)와 같은 국가들은 여기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합니다.

-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 국가들이 공적 국가간 보고서(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개발 금융기관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정보보고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이 책임을 다하는 세금 정책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문제점

수 십년 간 기업들은 법인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을 가진 국가 혹은 '법인세 피난처'에서 핵심 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윤을 인위적으로 유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소득 이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잠재적인 세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제 기업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산업 단위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행위가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별 기준에 맞춰 소득이나 납부한 세금을 발표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조세 피난처 사용을 숨기기 위해 통합 계좌(aggregate accounts)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들이 지불한 돈의 목적과 그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내는 투명성이야말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국제 개발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사용 역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계 조세제도의 개편을 옹호하는 정부와 국제기관은 개발 금융기관의 최소한의 공공조달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대출기관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한 금액이 2010년 120억 달러에서 2015년 287억 달러로, 불과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⁸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과세 소득이전은 개발도상국의 수익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해결책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재정정보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납세 의무이행 여부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 회피를 일삼는 기업들에게는 단 1달러의 대외 원조(Overseas aid money)마저도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개발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투자한 모든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업을 영위 중인 모든 국가의 국가간 재무 보고서(CBCR)를 제출 받아 이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면과제

현재의 유럽 및 OECD의 국가간 보고서들은 기업의 재무보고서의 공개 열람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즉, 가난한 국가들은 기업의 탈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기업의 재무보고서 공개 열람에 있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업들의 EU 내 운영에 대한 보고만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기업들이 어디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어디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제안 자체가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3. 부자들의 세금 은닉을 밝혀야 합니다.

- 정부 및 기관들을 중심으로 유령회사(Shell companies), 은행 계좌, 재단, 신탁, 재산 등과 같은 자산 소유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대한 공식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금융 기관들 간 실소유권 및 재무자료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점

재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최상위 부자들이 탈세를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하게끔 하고, 또한 엄청난 금액의 과세 소득과 이윤을 해외로 은닉할 수 있게 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마련합니다. 전 세계 금융 자산(7.6 조 달러) 중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 과세 및 통제를 피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전체의 8% 가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⁹ 남미 및 카리브해에 사는 부자들이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돈에 세금을 매길 경우, 3200 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¹⁰ 부자들이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금액은 전 세계 GDP 의 10% 정도로, 하지만 가장 부유한 0.01%의 사람들이 탈세를 할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비해 30%를 적게 냅니다.¹¹ 결국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최상위 부자들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만 140 억 달러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아프리카의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¹² 전 세계의 10%의 금융 비밀거래는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는 부패, 돈세탁 및 다른 불법적인 금융 흐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

본시장 내 위험 파악 및 완화라는 금융 감독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해결책

정부 및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신탁 및 재단의 실소유권을 지닌 실제 소유주들 또는 최종 소유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자동 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에 부를 이전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조세 투명성의 개선에 따라 공적 명단 작성을 위한 새로운 정부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¹³ 유럽연합의 반(反) 자금 세탁 지침(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또한 유럽 연합에 소속된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 단위의 실소유권 정보를 기초로 명단 작성 및 정부 당국에 한해 자료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0 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타 국가에 거주하며 금융자산 및 소득을 금융 기관을 통해 유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OECD의 새로운 공통 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과 미(美) 금융계좌 정보교환 협정(U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근거하여 자동 정보 교환에 동의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들만이 위와 같은 정보교환 방식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¹⁴

이제 정부가 앞장서 비협조적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부유한 국가와 조세 피난처의 협정 준수 및 OECD의 공통 보고 기준 참여 독려를 위해 원천징수세 추가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면과제

허점과 구멍이 남아있는 한, 탈세를 위해 돈을 은닉하는 사람들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은닉된 부의 대부분을 보관 중인 조세 피난처 역할을 맡는 국가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가

여전히 정부 및 기관 주도의 실소유주 공식 명단 작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4. 조세 협상에서 균형 맞춰야 합니다.

- 조세 조약 협상이 개발 도상국의 과세 기준을 낮추는 의도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 기부자(Donors)와 국제 금융기관이 중개한 협력 약정 역시 개발 도상국의 과세 기준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문제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많은 조세 협정들이 개발도상국에게 불합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세 조약은 '어떤 국가가 외국 소유의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인 지를 결정하는 양 국가 간의 협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경제력)에 차이가 나는 국가들 간의 조세 조약은 고소득 국가가 더 많은 과세 권한을 가져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돈이 다시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국 다국적 기업은 모든 국가에서 특정한 형태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고소득 국가는 투자 및 지원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보장해야 합니다.

해결책

개발 도상국과의 조세 조약 협상은 개발 협업 목표와 그 맥락을 같이 해야 하며,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의 목표(Agenda 2030'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향한 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당면 과제

G20 과 OECD 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¹ 실행 계획'에서 조세 조약 내 '불균형 문제'와 '과세 권한 할당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과 할당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희생을 담보로 OECD 회원국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의 이유로는 개발도상국이 BEPS 협상을 위한 현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4. 세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세계 개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 모든 국가가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 간 조세 협력을 이끌고 조정할 수 있는 국제 세무 기구가 출범해야 합니다.

문제점

세계를 금융 위기로 몰아넣었던 재정상의 무계획성과 모호한 조세 규칙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국제 협의체들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금융 비밀 및 산업 단위의 탈세에 중지부를 찍어야 하는 역할 이행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s) 사건은 개인 및 기업 단위 탈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피하고 있는

¹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것.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의 불평등 완화를 방해하면서도 자신들의 사업을 뚝뚝히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세제 및 조세 투명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세제는 여전히 기업의 기호와 부자들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기업 로비스트와 기득권의 불균형적인 영향력과 세금 및 조세 투명성 제도 입안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을 아예 배제하거나 동등한 입장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는 현재의 국제적인 조세 제도에서 드러났던 결함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해결책

다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 조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범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세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혁 과정은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G20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OECD 역시, 최근 이루어진 국제 조세 개혁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중요 주제들도 포함시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스팜이 지적하는 중요 주제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력 있는 조세 유인책(tax incentives)의 승인 및 세율 인하
- 조세 조약 규정, 이전 가격 및 영구 시설 법안(permanent establishment rules)의 개정과 같은 국가 간 과세 권한 재조정
- 양도 소득세 탈세 방지
- 내부 거래 가격 조작 방지 및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 마련
- 상품에 대한 과세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제적인 조세 문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감독

하기 위한 국제 세무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모든 국가들 및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 은행(World Bank) 및 OECD 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앞장서서 법인세에 대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억제하고 기업의 정당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동의를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당면 과제

사실 G20 및 OECD 회원국들은 자신들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들을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시키는 '포괄적 세제 개혁협상'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독립적인 국제 세무기구의 출범을 반대해왔습니다.

2015 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된 국제 연합 개발재원 총회(UN Financing for Development Summit)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세무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협의 요구에 대한 최종 결의안은 강대국 집단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세제 협력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고 난 후, 간신히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해 세제 개혁과 관련한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협의체. 이러한 협의체가 마련되기 전까지 탈세를 뿌리 뽑지 못할 것이며,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조세 피난처를 없애고 기업과 특급 부자들의 탈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번 글에서 언급한 5 가지의 명확한 과정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

는 너무 많은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기업과 최상위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NOTES

- 1 D. Hardoon. (2017). An Economy for the 99%: It's time to build a human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not just the privileged few. <https://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an-economy-for-the-99-its-time-to-build-a-humaneconomy-that-benefits-everyone-620170>
- 2 G. Zucman. (2015).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http://gabriel-zucman.eu/hiddenwealth>
- 3 Ibid
- 4 UNCTAD. (2015). World Investment Report.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ir2015_en.pdf
- 5 E. Berkhout. (2016). Tax Battles: The dangerous global race to the bottom on corporate tax. <https://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tax-battles-the-dangerous-global-race-to-the-bottom-on-corporate-tax-620159>
- 6 Council of the EU. (2016). Council conclusions on an external taxation strategy and measures against tax treaty abuse (9452/16).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9452-2016-INIT/en/pdf>
- 7 G20. (2016). Communiqué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of April 2016. http://wjb.mof.gov.cn/pindaoliebiao/gongzuodongtai/201604/t20160416_1952794.html
- 8 S. Jespersen. (2016). The IFC and Tax Havens: The need to support more responsible corporate tax behaviour. https://www.oxfam.org/sites/www.oxfam.org/files/file_attachments/ifcandtaxhavensen.pdf
- 9 G. Zucman. (2015).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http://gabriel-zucman.eu/hidden-wealth>
- 10 D. Itriago. (2014). Fiscal Justice to Reduce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www.oxfam.org/sites/www.oxfam.org/files/file_attachments/bp-lacfiscal-justice-100914-en.pdf
- 11 A. Alstadsæter, G. Zucman, and N. Johannesen. (2017). Tax Evasion and Inequality. http://clausen.berkeley.edu/assets/clausen_open_pages/3/tax_evasion.pdf
- 12 D. Hardoon. (2017). An economy for the 1%: How privilege and power in the

economy drive extreme inequality and how this can be stopped.

<https://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an-economy-for-the-1-how-privilege-and-power-inthe-economy-drive-extreme-inequ-592643>

13 The UK committed to creating a central public beneficial ownership register of companies incorporated there (although is yet to include foundations and trusts). Other countries like Ukraine, Denmark, Austria, and France have also signalled their support for public registers.

14 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 Unequal Exchange: How poor countries are blindfolded in the global fight against banking secrecy.

<https://financialtransparency.org/unequal-exchange/>

© Oxfam International August 2017

This paper was written by Larissa Alles with guidance from Dina El-Mamoun. Oxfam acknowledges the assistance of Saif Alhaddi and Ibrahim Alwazir in its production. It is part of a series of papers written to inform public debate on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policy issue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issues raised in this paper please email advocacy@oxfaminternational.org

This publication is copyright but the text may be used free of charge for the purposes of advocacy, campaigning, education, and research, provided that the source is acknowledged in full. The copyright holder requests that all such use be registered with them for impact assessment purposes. For copying in any other circumstances, or for re-use in other publications, or for translation or adaptation, permission must be secured and a fee may be charged. Email policyandpractice@oxfam.org.uk.

The information in this publication is correct at the time of going to press.

Published by Oxfam GB for Oxfam International under ISBN 978-1-78748-036-0 in August 2017.

DOI: 10.21201/2017.0360

Oxfam GB, Oxfam House, John Smith Drive, Cowley, Oxford, OX4 2JY, UK.

OXFAM

Oxfam is an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20 organizations networked together in more than 90 countries, as part of a global movement for change, to build a future free from the injustice of poverty. Please write to any of the agencies for further information, or visit www.oxfam.org

Oxfam America (www.oxfamamerica.org)

Oxfam Australia (www.oxfam.org.au)

Oxfam-in-Belgium (www.oxfamsol.be)

Oxfam Brasil (www.oxfam.org.br)

Oxfam India (www.oxfamindia.org)

Oxfam Intermón (Spain)
(www.oxfamintermon.org)

Oxfam Ireland (www.oxfamireland.org)

Oxfam Italy (www.oxfamitalia.org)

Oxfam Japan (www.oxfam.jp)

Oxfam Mexico (www.oxfammexico.org)

Oxfam New Zealand (www.oxfam.org.nz) Oxfam
Novib (Netherlands) (www.oxfamnovib.nl)

Oxfam Québec (www.oxfam.qc.ca)

Oxfam Canada (www.oxfam.ca)

Oxfam France (www.oxfamfrance.org)

Oxfam Germany (www.oxfam.de)

Oxfam GB (www.oxfam.org.uk)

Oxfam Hong Kong (www.oxfam.org.hk)

Oxfam IBIS (Denmark) (www.ibis-global.org)

www.oxfam.org

Oxfam South Africa (www.oxfam.org.za)

